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와 ‘평행출처주의’의 현재적 의미

이 경 래*

1. 머리말
2. 식민주의 아카이브: 행정기록 중심의 아카이브와 ‘다중 출처주의’의 형성
 - 1) 백인 관료체제의 현용 행정기록 수집 전통
 - 2) 다중 출처주의의 발전
3.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 원주민 아카이브 수집과 인명 색인
 - 1) 문화 통합과 화해의 대상으로서 원주민 아카이브
 - 2) 호주원주민 인명 색인 작업
4. 동시대 아카이브: 원주민 타자화 극복과 평행 출처주의의 등장
 - 1) 호주원주민 주체의 타자화 비판
 - 2) 다중 출처주의에서 평행 출처주의로
5. 결론: 평행 출처주의의 현재적 함의

* 국제공인아키비스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주요 논저: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구 제38호, 2013;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공저),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투고일 : 2014년 3월 19일 ▪최초심사일 : 2014년 3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25일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한 ‘평행 출처주의’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이것이 국내 과거사 아카이브의 기록화 과정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 이 글은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발전을 중심에 놓고, 그 시기를 크게 식민주의 아카이브,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 그리고 동시대 아카이브로 구분했다. 각 국면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호주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리 및 구축 방법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들과 원주민 아카이브의 진화 과정을 살폈다. 즉 식민주의 아카이브에서는 백인 관료들이 생산한 현용 행정기록 중심의 아카이브 전통과 그로 인한 다중 출처주의의 발전에 주목했다. 후기 식민주의 아카이브에서는 기록화 범주로서 호주원주민의 등장과 이들에 대한 인명 색인 작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시대 아카이브에서는 호주 원주민의 타자화를 극복하기 위한 호주 기록학계의 최근의 움직임을 ‘평행 출처주의’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이 개념의 현재적 의의를 통해 그동안 역사에서 재현되지 못한 피해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는 국내 과거사아카이브의 민주적인 동시대적 재구성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주제어 :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 아카이브 전환, 아카이브 재규명, 호주 기록관리 역사, 호주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 다중 출처주의, 평행 출처주의, 사회적 출처주의, 호주 원주민연구소, 원주민 인명색인,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 빼앗긴 세대

1. 머리말

데리다의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¹⁾를 시작으로, 아카이브는 이제 단순히 기록의 집합체나 보관소가 아니라 인식론적 투쟁(epistemological struggle)의 장소로서 이해되고 있다. 아카이브에서 어떤 기록을 보관하는지 이용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정리되고 분류·기술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식민주의 정치학 혹은 근대 권력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즉 과거의 중립적·선별적 기록의 관점보다는 지배계급의 통치술로서 아카이브를 보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서구 기록학계내 이와 같은 ‘아카이브 전환’(archival turn)이란 역사적 변곡점은, 이제 아카이브를 과거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이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복원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의미가 충돌하고 부딪히는 장소로서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최근에 ‘아카이브 전환’의 관점을 대변하는 연구 성과는 풍부하다. 예컨대, 해밀턴(Carolyn Hamilton)이 편집한 책 『아카이브 재규명(Refiguring the archive)』은 식민 사회에서 후기 식민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문서 왜곡, 기록 파괴, 강요된 침묵을 강제하는 아카이브의 식민성 극복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²⁾ 아카이브의 지배 통치술적 오염에 대한 비판적 지적인 셈이다. 스톨러(Ann Stoler)의 식민주의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은 아카이브를 의미와 지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archives-as-process)으로 간주하면서, 식민주의 아카이브의 분류와 기술·평가 등 각 프로세스에 있어서 식민주의 극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³⁾ 또한 아카이브의 ‘저작자’(authorship)를 중심으로 한 출처주의에

1) Jacques Derrida,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London, 2006.

2) Carolyn Hamilton et al., *Refiguring the Archives*, Cape Town, South Africa: David Philips Publishers, 2002.

대한 비판적 시각도 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분류 및 기술 원칙인 저자 중심의 출처주의가 식민주의와 그 이후에 지배계급/비(非)당사자들에 의한 아카이브의 통제력을 강화한 반면 피지배계층이자 피해당사자의 기록 주체성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지배계급 중심의 출처주의가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 구성의 주요 매개가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⁴⁾

아카이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기록 관리체계를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정책)에 기반한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정부로 이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기식민주의 국가들은, 아카이브가 식민시기 통치수단으로 전락했고 피지배계급을 소외시키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해 나갔다. 특히 후기식민주의에 대한 호주 기록학계의 동시대적 논의는 그 사회의 피지배계급인 호주 원주민의 토착 방법을 존중하는 원주민 중심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로 집약되었다. 호주의 경우에는 후기식민주의와 아카이브의 연계성을 사회의 피지배계층인 원주민의 맥락 속에서 찾고자 했다.

‘아카이브 전환’ 테제에 비춰 보면, 호주의 (후기)식민사회의 역사는 흥미롭다. 호주사회에서 피지배계층인 원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백인 지배세력과 문화적·사회적으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지배적인 백인중심의 기록관리 체계와 동등한 원주민 기반의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

3) Ann Laura Stoler, “Colonial Archives and the Arts of Governance,” *Archival Science* 2, 2002.

4) Jane Anderson, “Anxieties of Authorship in the Colonial Archive”, Cynthia Chris and David A. Gerstner, eds, *Media Authorship*,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2013.

다. 이러한 동시대적 사회적 요구는 결국 아카이브의 분류 및 기술체계에 있어 극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민주의 시기 ‘단일 출처주의’와 후기식민주의 시기에도 여전히 동일한 지배세력인 백인관료 체제를 출처로 하는 ‘다중 출처주의’로부터 오늘날 피지배계급인 원주민을 지배계급의 출처와 동등하게 복원하는 ‘평행 출처주의’로의 아카이브 전환이 그것이다. 호주 기록학계는 평행 출처주의를 명시적으로 후기식민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인 호주원주민 공동체 기반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효과적 분류 및 기술 체계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호주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례, 특히 ‘출처주의’를 중심으로 한 호주 아카이브의 진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출처주의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이것이 국내에서 역사 기록화의 과정에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주된 내용은, 호주의 아카이브 체제가 식민주의에서 후기식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살핀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이미 1900년대 초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여전히 백인 엘리트 통치를 기반으로 원주민 수탈과 억압은 독립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 글은 형식적 독립의 시점에서 호주의 식민주의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식민사회에 피지배층으로 존재했던 호주 원주민들이 호주의 기록관리 역사에 중요한 범주로 간주되는 시점을 전후로 식민주의와 후기식민주의의 시기 구분을 시도한다.

단순히 영국령으로부터 독립이라는 형식사적 접근이 아니라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발전을 그 중심에 놓고 시기를 구분한다. 즉 호주 아카이브의 발전 시기와 국면을 크게 식민주의 아카이브(1788~1960년대),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1970년대~1990년대), 그리고 동시대적 아카이브 접근(2000년대 이후)의 세 시기로 나눈다. 각 국면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호주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리 및 구축 방법

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들과 원주민 아카이브의 진화 과정을 살핀다. 결론에서는 호주 아카이브의 경험을 통해서, 국내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의 이행기에 군부에 의해 은폐되고 잊혀졌던 ‘민초’⁵⁾들에 대한 현대사 속 또 다른 식민주의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숙고한다. 호주의 (후기)식민주의 역사 속 아카이브 구축 사례로부터 국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극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최근에 피지배/피해당사자/공동체의 집단 기억의 역사적 재현을 위해 진행되었던 국내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민주적 구축을 위한 역사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식민주의 아카이브 : 행정기록 중심의 아카이브와 ‘다중 출처주의’의 형성

1) 백인 관료체제의 현용 행정기록 수집 전통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원주민들의 대륙에 도착한 해가 1788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로부터 호주의 백인 통치사는 시작된다. 영국의 식민주의자들이 호주에 처음 정착한 이래, 호주의 식민주의 아카이브는 백인 식민주의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는 영국과 호주 사이에 오가는 서신 기록의 관리에 주로 집중되었다. 당시 호주 토착 원주민들의 지배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구술, 노래, 춤, 그림 등의 형태였다. 하지만 영국의 식민관료들은 이미 문화적으로 관료체제와 문자에 기반한 기록관리 방

5) ‘민초’는 이 글에서 호주 원주민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선택한 은유적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민초’를 사회학적으로 ‘민중’, ‘풀뿌리 대중’, ‘공동체 구성원’을 상징하는 피지배 계층이자 지배계층에 의해 쉽게 기록의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기억화 과정의 피해 집단으로 상정한다.

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영국의 아카이브 체제를 식민지에 강제로 이식했다. 군사, 상업, 법, 행정 업무상에 발생하는 식민통치국과 식민지 사이에 주고받는 보고서나 전신등 문서의 형태가 아카이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받은 문서와 보내는 문서의 사본은 분리해서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취했는데, 이것은 영국이 중세 때부터 문서를 관리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이후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근 100년 이상 호주에서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에서 식민 관료들의 현용 행정 기록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갔다. 현용 행정 기록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기록의 참고(reference)와 복구(retrieval)를 위해 지적 통제 체제가 구축되었는데, 예를 들면 발송하는 서신들은 지역별, 국가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취했다.⁶⁾

영국 연방 자치령으로 1901년에 독립한 호주는 유럽의 식민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다른 독립국들처럼 식민주의 아카이브의 강한 잔재 속에 서 있었다. 특히 호주는 독립 이전에 토착 원주민에 대한 식민통치 체제가 독립 이후에도 백인 통치권자에 의해 지속되었기 때문에 식민주의 아카이브 전통이 1960년대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호주는 당시 관료체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록물 관리 관행에 있어 영국의 공공기관 모델을 따랐다. 실제로 호주의 기록관리 시스템은 영국의 공공기록보존소(Public Records Office)의 모델을 따라 관료체제의 행정 기록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역사적·문화적 기록들은 주로 국립도서관이나 주립도서관, 지역도서관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이중 체계를 갖췄다.⁷⁾

기록관리의 조직체계는, 행정적으로 초기에는 연방의회도서관(Commonwealth

6) Michael Piggott, *Archives and Societal Provenance: Australian essays*, Chandos, UK, 2012, pp.15-34.

7) Adrian Cunningham, "Archival Institution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eds,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 Center for Information Studies, New South Wales, pp.30-32.

Parliamentary Library) 내부에 위치했다가 곧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에 재배치되었다. 이처럼 도서관내에 아카이브 업무담당 부서를 행정적으로 배치한 것은 식민지 시기부터 기록관리를 정부 도서관 내부의 작은 부서에서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본격적으로 기록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연방기록과’(Commonwealth Archives Division)가 생겨난 것은 연방이 출범한 지 40년 후의 시기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전쟁사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연방기록과는 국립도서관 내부의 조직으로 활동하다가 마침내 1961년에 ‘연방아카이브보존소’(Commonwealth Archive Office)라는 명칭으로 국립도서관에서 분리되었다.⁸⁾

국립도서관에서 독립한 연방아카이브보존소는 자신의 위치를 연방정부와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반면 아카이브의 문화적·역사적 역할과 결별했는데 이러한 기관의 정체성은 199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⁹⁾ 초창기 연방아카이브보존소에 근무하는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호주 관료체제가 영국의 모델을 따른 만큼 쉐킨슨의 행정 기록 중심의 아카이브 전통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미국에서 마가렛 노턴의 영향으로 아카이브가 도서관의 역할과 명확히 구별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호주에 그대로 이식되었다. 아카이브가 도서관으로부터 분리되는 1961년을 기점으로 연방아카이브보존소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는, 정부 부처가 가지는 현용 행정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아카이브의 책무로 간주하였다.

8) Adrian Cunningham, Ibid, pp.34-37.

9) 1983년 아카이브법(Archives Act)의 제정으로, 호주국립기록청은 90년대 이후에는 현행 행정기록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구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변화에는 1973년 캐나다 국가기록위원장인 Kaye Lamb가 호주를 방문하여 행정기록만을 수집하는 기록청을 비판하면서 문화적 기관으로서 아카이브의 역할을 강조한 측면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rian Cunningham, Ibid, p.36.)

백인관료의 현용 행정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에서 호주원주민의 기록은 행정업무의 설명 책임성을 입증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수집·관리되었다. 원주민의 기록은 호주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이 아니라 원주민의 거주 지역이 속한 주정부의 아카이브에서 대부분 관리하였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1970년대 중후반까지 국립기록청이 보관하던 원주민 기록이라 해봐야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NT)를 연방정부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생산한 기록, 그리고 원주민에 관련된 업무를 연방정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1975년에 빅토리아주(VIC)에서 이관해 온 원주민 기록이 전부였다.¹⁰⁾ 이들 중 대부분의 기록은 주립 아카이브와 주정부에 보관되어 있는 복지관련 기록들이었고 원주민 개개인에 대한 케이스 파일은 극히 적었다. 국립기록청에 보관되어 있는 원주민 관련 기록은 실상 퀸즐랜드 주립(QLD)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주민 업무관련 기록 외에 연방정부의 다른 업무와 관련된 기록 속에 원주민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회의록, 연금 등 사회보장에 관한 기록,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A)의 마라링가(Maralinga)에서 영국의 핵실험에 관한 기록, 1차 대전 등에 동원됐던 원주민들의 개인 파일 기록 등이 있었다.¹¹⁾

여전히 현용 행정기록 중심이었으나 국립기록청보다는 주립 아카이브(State Archives)가 사정이 좀 낫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주립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원주민에 관한 기록은 원주민의 사회성과 생활방식에 있어 특이성을 다룬 문서를 비롯해서 원주민의 출생률과 사망률, 원주민의 고용 상태, 그리고 임금 협상 등에 관한 기록들이 존재했다.¹²⁾

10)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s Bringing Them Home Name Index*, <http://aiatsis.gov.au/atsilirm/conferences/conf08/papers/THE%20NATIONAL%20ARCHIVES%20OF%20AUSTRALIA%E2%80%99S.doc>), [cited 2014. 3. 8].

11)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ibid.*

12)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ibid.*

또한 가족들로부터 강제 납치되거나 분리되었던 원주민 아이들(‘빼앗긴 세대’ Stolen Generation)¹³⁾의 가족에 대한 기록들과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동화정책, 그리고 대량 학살의 기록 등이 있었는데, 주로 백인 관료들이 원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리고 원주민 관련 행정업무의 설명책임성을 증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원주민 기록들을 제한적으로 수집했다.

2) 다중 출처주의의 발전

영국 식민관료에 이어 연방아카이브보존소에 의해 지속되어 온 백인 지배관료의 현용 행정기록 중심의 아카이브 관리체계는 현용 기록의 관리와 지적 통제에 관한 보다 효율적이고 개혁적인 호주만의 기록관리 방법론의 개발로 이어졌다. 식민지 독립 후 초창기 호주연방의 아카이브 관리체계는 풍(fonds)이나 레코드 그룹(Records Group)이라는 ‘단일 출처주의’의 프레임을 통해 현용 행정기록들을 관리하였다. 기록의 출처는 당시만하더라도 기관, 기업, 또는 개인 등 단일한 실체로 간주되었고, 다른 출처를 갖는 기록물들과 서로 섞이지 않게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연방아카이브보존소를 중심으로 현용 행정기록의 보다 효율적인 지적 통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호주연방 아키비스트였던 이안 맥클린(Ian Maclean)과 피터 스콧(Peter Scott)은 당시 호주의 관료체제, 즉 행정단위와 정부기관이 극도로 불안

13) 호주는 영연방국가로 탄생하기 이전인 1869년부터 이미 ‘원주민 보호법’(Aboriginal Protection Act)을 통해 원주민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해 양육함으로써 순수한 원주민 인구나 문화의 소멸을 조장했다. 이러한 정책은 호주가 백호주의정책을 채택했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공식적으로 1969년에 폐지되었다. 191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적어도 100,000명 이상의 원주민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분리·양육되었고, 어떤 원주민 가구도 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비이성적 식민주의정책으로 말미암아 분리·양육된 원주민 아이들은 역사적으로 ‘빼앗긴 세대’(Stolen Generation)라고 불린다.

하게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기능 재분장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¹⁴⁾ 정부 조직의 기능이 재분장되면 기록 역사가 그에 따라 재배열되었는데, 맥클린과 스콧은 이런 조직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순차적(sequential) 출처들을 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레코드 그룹에 기반한 정태적이고 사후적 접근의 서지적(post-hoc bibliographic) 기술방식 대신에 현용 기록 관리(record-keeping) 과정에서 드러나는 동적인 행정 맥락을 기술 체제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다.¹⁵⁾ 그리하여 새롭게 등장한 것이 ‘다중 출처주의’(multiple Provenance)¹⁶⁾였다. 대부분의 호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역사적 기록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레코드 그룹 개념을 적용했지만, 다중 출처주의는 현용 기록의 생산 및 관리에 참여한 여러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개별 시리즈들과 서로 다중적으로 링크함으로써 행정적, 기능적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도 그 변화의 내력을 유기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도를 갖고 등장했다.¹⁷⁾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출처주의에 기반해 여전히 풍이나 레코드 그룹을 관리단위의 기본으로 하는 한편, 출처변동과 다중 출처의 문제를 전거 제어와 색인, 그리고 다계층의 기술 등 서지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일정 조직을 풍의 구성단위로 삼되, 기록물 기술 영역과 생산자 및 출처맥락에 대한 전거 레코드를 별도로 구축하여 그 변동내력을 관리한다면 풍이 갖는 전체성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조직이 갖는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¹⁸⁾ 국제기술표준

14) 이승역, 「호주의 공공기록관리 전략」, 『기록보존』 15, 2002, 175쪽.

15) 이승역, 앞의 글, 172쪽.

16) Peter Scott, "The Record Group Concept: A Case for Abandonment", *American Archivist*, vol.29, no.4, Oct, 1966.

17) 방효순, 「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권 2호, 2002, 87쪽.

18) 방효순, 앞의 글.

인 ISAD(G)의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무렵 호주는 백인 통치의 연속성 속에서 현용 행정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선거 제어나 색인 등은 단순히 기록이 발견되는 경로를 의미할 뿐 기록의 역동적인 변동 내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현용 기록의 생산과 기능, 그리고 과정을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보다 동적인 맥락을 확보할 수 있는 다중 출처주의의 프레임을 개발했던 것이다.

호주의 다중 출처주의는 일종의 출처주의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풍이나 레코드 그룹을 통한 단일 출처주의가 현용 행정기록의 출처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기록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기록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많은 의미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의 다중 출처주의는 직제의 변화에 기반한 순차적 다중 출처주의로, 비록 복합 출처를 상징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배계급인 백인 관료체계 내부의 출처들만을 고려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다중 출처주의는 지배계급이 중심이 되는 동시에 피지배계급인 호주 원주민이 배제되는 식민주의 아카이브 체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호주만의 독특한 식민주의 시기 기록관리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3. 후기식민주의 아카이브 : 원주민 아카이브 수집과 인명 색인

1) 문화 통합과 화해의 대상으로서 원주민 아카이브

식민주의 아카이브에서 호주원주민 기록은 백인 관료체제의 행정기

록의 일부분으로서 업무의 설명책임성을 뒷받침하는 한에서 수집되고 관리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 호주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즉 원주민 기록이 더 이상 행정기록으로 관료 업무행위의 증빙자료로서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의 기록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원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원주민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기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식민주의 아카이브에서 후기 식민주의 아카이브로의 이러한 국면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주 사회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과거 원주민에 대한 부당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원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인종 차별의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반향은 결국 '1967년 국민투표'(1967 Referendum)로 이어졌고, 원주민에 대한 호주정부의 극적인 정책 전환을 가져왔다. 이 국민투표를 통해 마침내 원주민들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이전까지 주로 주정부에서 원주민에 대한 행정을 맡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원주민의 정책이나 법률 제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는데, 연방정부는 1967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주민의 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

호주 사회 전반에서 원주민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식민사회에서처럼 원주민들이 더 이상 배제나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통합의 대상으로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변화는 특히 이 무렵 부상하기 시작한 원주민 토지소유권(native title)의 문제, '빼앗긴 세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원주민 언어의 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¹⁹⁾ 원주민들을 자신의 땅에서 쫓아

19) Jane Anderson, "Anxieties of authorship in the colonial archives," *Media Authorship*, Cynthia Chris and David A. Gerstner, eds.,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p.238.

내고 원주민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원주민 언어를 말살하려고 한 것은 원주민 문화를 파괴하려는 호주정부의 전략이었다. 호주원주민들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선 자신의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이 필요했고,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된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찾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이 필요했다. 또한 250개 이상의 다양한 원주민의 언어로 표현된 원주민 문화에 대한 이해는 원주민 언어에 관련된 기록, 즉 단어 목록, 녹음, 필름 등의 기록들을 필요로 했다. 이처럼 호주 원주민과의 문화적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호주원주민을 그 중심 주제로 삼는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호주 원주민과의 문화적 통합이란 국가적 요구를 반영해서 과거와 현재의 호주 원주민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연구를 위한 국가 기관으로 ‘호주원주민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이하 AIATSIS)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설립 초기에 “유럽적 방식에 직면해서 호주원주민의 전통이 사라지기 전에 언어, 노래, 미술, 유물, 의식, 그리고 사회적 구조를 기록하는 것”을 표방했다.²⁰⁾ 이 연구소는 역사적으로 1964년의 의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됐지만 연구소가 원주민들을 연구소 위원회 등 연구소의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체 아카이브를 본격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부터였다. 이후 연구소는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하면서 원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원주민 문화에 대한 기록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다.

호주원주민연구소의 활동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사 부서’(Family History Unit)는 1979년부터 원주민에 대한 간단한 개인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원주민 전기 색인’(Aboriginal Biographical Index) 작업을 시작했다. 오늘날 색인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 이후

20) <<http://www.aiatsis.gov.au/corporate/history.html>>, [cited 2014. 3. 8].

‘빼앗긴 세대’ 구성원들이 가족을 되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주민의 가족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학술적 자료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연구소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나타나는 원주민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현재 약 70,000개의 원주민 색인기록을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다.²¹⁾ 가족사 부서는 호주 전역에 걸쳐 관련 기관 및 웹사이트와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원주민 가족사에 관한 기록을 함께 수집한다.

1989년에 제정된 ‘호주원주민연구소법’에 의해 새롭게 정립된 호주원주민연구소는 그 주요 임무중 하나로 원주민 연구에 관련된 기록으로 구성된 문화자원 아카이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을 표방했다.²²⁾ 1993년에 제정된 원주민토지소유권법(Native Title Act)에 따라 원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돕기 위해 연구소 내에 ‘원주민 토지소유권연구부서’(Native Title Research Unit)가 새로 만들어 졌다. 이 부서는 호주원주민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인정과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자문을 그 주요업무로 삼았는데, 연구소내 원주민 관련 소장기록, 컬렉션, 문헌들에서 호주 원주민들이 토지소유권 관련 기록들을 찾는 것을 도왔다. 원주민토지소유권법은 원주민이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 법정에서 토지에 대한 원주민의 연계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기에, 원주민들은 법정에서 땅에 대한 자신들의 지속적 연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관련 문헌을 찾기 위해 연구소를 찾았다.

호주원주민연구소에는 원주민 언어의 기록화를 그 중요 임무로 표방하는 ‘호주언어센터’(The AIATSIS Centre for Australian Languages)도 있다. 다양한 원주민 언어에 관련된 자원들을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원주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호주원주민연구소는 이렇듯 이전의 식민주의 아카이브에

21) <<http://www.aiatsis.gov.au/fhu/abi.html>>, [cited 2014. 3. 17].

22) <<http://aiatsis.gov.au/corporate/about.html>>, [cited 2014. 3. 17].

서 호주원주민에 대한 아카이빙 방식을 탈피해서 현재까지 필름,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 호주 원주민 연구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게 된다. 호주원주민연구소는 앞서 언급한 원주민 가족사, 토지소유권, 언어라는 세 가지 연구사업을 중점으로 호주원주민 문화와 역사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원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기획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호주원주민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수집은 이렇듯 1970년대부터 원주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아카이브 수집을 본격화하였다. 현용 행정기록 중심의 식민주의 아카이브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된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호주원주민 연구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의 주요 기록화의 범주로서 우뚝 서게 된다. 호주원주민 공동체에 대해서 이전까지 배제와 무기억의 식민주의적 전략에서 70년대 이후 통합과 기억화의 후기식민주의적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2) 호주원주민 인명 색인 작업

호주 국립기록청이 호주원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통합에 본격적으로 응대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에 호주정부 산하기관인 호주인권평등기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의 보고서, ‘그들을 집으로 보내라’(Bringing Them Home, 이하 BTH)가 발간되면서 부터이다.²³⁾ BTH 보고서는 호주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몰고

23) 이 보고서를 통해 비밀리에 시행된 호주원주민 ‘아동제거정책’이 호주에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기관이 호주의 각종 법안들을 이용해서 호주원주민 부모의 자녀양육권을 부정하고, 그들로부터 자녀들을 빼앗아 수용소나 기독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아원 등에 감금했거나 또는 백인 가정에 입양시켰다고 전한다. 이 보고서가 1997년에 처음으로 호주사회에

왔는데, 특히 기록관리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국립기록청을 비롯한 주립 아카이브가 호주원주민에 대한 인명색인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원주민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추동했다.²⁴⁾

원주민 인명색인 작업의 필요성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국립기록청 내부에 존재해왔다. ‘빼앗긴 세대’의 원주민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국립기록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들과 관련된 기록물을 찾는 일이었다. 국립기록청의 온라인 카탈로그인 레코드서치(RecordSearch)를 이용해 관련 파일의 시리즈(또는 그룹) 또는 드물게는 개인 파일들에서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했지만, 원주민 개개인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은 찾기가 어려웠다. 현용 행정기록 중심의 관료 조직이나 기관을 출처로 하여 분류·기술된 국립기록청의 기록관리 체계에서 원주민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국립기록청은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여 이들을 위해 파일들에 들어있는 원주민 관련 내용들을 색인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기금 마련에 실패해 당시 무산된다. 그러나 1990년대 말 BTH 보고서에서 원주민의 인명 색인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 22a)의 결과로서 마침내 국립기록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여에 걸쳐 호주정부로부터 200만 달러를 제공받는다. 그리하여 국립기록청은 호주원주민의 기록들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윈, 캔버라, 그리고 멜버른의 주립아카이브나 주정부에 소장되어 있는 원주민 관련 기록을 색인하고 복사하여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색인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BTH 보고서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 22b)에 따라 원주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한편 문서들은 재가공하지 않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을 때 당시 존 하워드 수상은 호주원주민에 대한 과거 호주정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24) (<http://www.humanrights.gov.au/publications/bringing-them-home-appendix-9-recommendations>), [cited 2014. 3. 15].

방식으로 색인 작업을 진행하였다.²⁵⁾

호주 국립기록청은 작업 초반부터 노던 준주(NT)의 원주민 자문단과 빅토리아주(VIC)의 원주민 공동체의 대표들과 협의하면서 인명 색인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색인에 포함될 정보의 종류, 색인 작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색인 작업, 복사, 그리고 보존의 상대적인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원주민들을 참여시켰다. 이미 원주민 인명 색인 작업의 경험을 가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A)와 퀸즐랜드주(QLD)의 주립아카이브, 그리고 호주원주민연구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자문을 구했다. 또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국립기록청은 다윈, 캔버라, 그리고 멜버른에 색인 작업팀을 배치하고, 팀 구성원의 대부분은 호주원주민으로 구성했다. 비록 호주정부의 지원은 2002년에 끝났지만 인명 색인 작업은 2004년 중반까지 계속되어 21,000개 관련 문서들이 원주민의 인명으로 연결되고, 426,000명의 원주민에 대한 인명 색인 등록을 완료했다.²⁶⁾

호주 국립기록청의 원주민 인명 색인 작업 외에도 많은 주립 아카이브들이 원주민 인명 색인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퀸즐랜드,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립 아카이브를 비롯해서 노던 준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 빅토리아주 등의 주립 아카이브에서 호주원주민에 대한 인명 색인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립아카이브(State Records of South Australia)의 경우, 보관 중인 공문서 속에 언급된 원주민들의 이름에 대한 색인 작업을 진행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Aborig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구축했다.²⁷⁾ 이 데이터베이스는 종족 이름, 닉네임, 나이, 성별, 지역, 기록의 기술, 그리고 주문서 참조번호(the State Records' reference number)의 정보를 입력했으

25) Ibid.

26)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ibid*.

27) <https://www.archives.sa.gov.au/aboriginal/#Aboriginal_Information_Management_System>, [cited 2014. 3. 15].

며, 100,000명 이상의 원주민 인명 등록을 마쳤다.

종합해보면, 호주에서 식민사회에서 후기 식민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지배계급인 백인관료 체제와 피지배계급인 호주원주민의 화해와 이를 통한 사회적 문화적 통합을 위한 주요한 사회적 기제로서 호주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은, 원주민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과 더불어 국립기록청을 비롯한 다양한 주립 아카이브에서 원주민 인명색인 작업의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호주원주민연구소는 70년대 이후 호주 원주민들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서 원주민의 참여를 통한 원주민 공동체기반의 아카이브 수집에 나섰다. 국립기록청을 비롯한 주립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90년대 말엽부터 원주민 공동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원주민 인명색인 작업을 진행하여 식민지 아카이브에서의 불안정한 원주민 기록관리 체제를 보완하고자 했다. 그러나 후기 식민사회에서 이러한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움직임은 이전 식민 시기의 아카이브 체제와 비교해 보면 크게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원주민들의 타자화를 극복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복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억압적 타자화와 배제의 식민주의적 역사에서 통합과 화해의 후기식민주의사로 전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백인 엘리트들에 의해 정의되는 원주민 역사의 복원에 가깝다. 그들 스스로 역사와 아카이브의 주체로 복귀하는데 좀 더 민주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논리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후기 식민주의 아카이브체제에서 현존하는 원주민 아카이브 구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호주 기록학계의 최근의 동향을 살펴본다.

4. 동시대 아카이브 : 원주민의 타자화 극복과 평행 출처주의의 등장

1) 호주원주민 주체의 타자화 비판

호주원주민연구소를 비롯해서 국립기록청과 주립 기록보존소들은 원주민 인명 색인 작업을 진행하여 원주민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되찾고 ‘빼앗긴 세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원주민 인명 색인의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아카이브를 방문한 원주민들은 원주민 인명 색인을 통해 자신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들 아카이브가 자신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들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노던 준주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문서나 기록에서 원주민의 이름이나 거주지는 영국식 이름이나 명칭을 사용했기에, 이런 경우 언급된 사람들이 원주민인지 백인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인명 색인에 등록하기가 어려웠다. 일반 파일이나 케이스 파일 시리즈들에서 언급된 사람이 원주민이나 이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립기록청은 배경 지식이나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원주민들을 색인 작업에 참여시키고 이들에게 지역사와 가족사를 검토하도록 했지만 원주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²⁸⁾

28) 또한 호주 국립기록청은 색인되는 기록들이 1870년대부터 1970년에 걸쳐 있고, 그러다보니 육필로 쓰여진 기록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색인 작업자들은 필기체가 단순화되고 고리모양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 1960년대 후반부터 쓰기를 배운 젊은 사람들로 오래된 손글씨를 해독하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기록청은 초등학교를 1960년

원주민 언어로 표기된 이름이 행정문서에 사용된 노던 준주의 경우에서 조차, 원주민의 이름이 대부분 순찰 경관이나 사회 복지사가 원주민의 구어를 발음대로 받아 적은 것이기에 하나의 이름에도 다양한 철자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국립기록청은 이 경우 만약 2페이지에 언급된 사람이 15페이지에 다른 철자로 언급된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이 맥락상 명확해지면 제 3의 대안적인 철자를 주고 양 페이지를 언급하면서 하나의 색인등록을 만드는 방식을 취했다.²⁹⁾ 이도 여전히 정확도와 신뢰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주민 자신의 이름을 아카이브에서 제대로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원주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인명 색인에서 발견하고 관련된 기록들을 아카이브에서 찾은 경우에도, 원주민과 관련된 기록은 원주민 부모들로부터 분리된 원주민 아이들이나 가족에 대한 개인 파일이나 기록 서류가 아니라, 백인관료인 보호관찰자의 행정기록이나 배급 통장 기록 등에서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는 기록들에서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국가 또는 국가의 관료가 기록의 생산자이자 저작자였고 원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극도로 행정적인 정보들만을 담고 있었다. 원주민들의 이름은 백인 저자/소유자/수집가의 이름 뒤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기록 속에서 찾는 데에는 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식민주의 아카이브가 원주민들을 기록의 주체로서 상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주 원주민 삶을 기록하는 아카이브가 원주민들에 의해 접근되고 이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³⁰⁾ 방문한

전에 다닌 국립기록청의 직원들을 활용해서 알파벳의 고어체를 해독하고자 했다.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ibid.*)

29)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ibid.*

30) 지난 20년 동안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이용에 있어 변화가 발생했다. 호주 원주민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에 원주민 아카이브에 대한 원주민들의 이용은 전체 이용자의 약 1%를 차지했지만, 2004년에 접어들면 이용자의 75% 이상

아카이브에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억들이 기록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집단 기억에 대한 역사적 설명성의 견지에서 보자면, 백인 통치술의 (후기)식민지 아카이브가 호주원주민의 정체성을 박탈하고 부정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다음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할머니의 파일이 전달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원주민 공동체에 관한 행정파일이었다는 것과 원주민을 관리하던 부서(Department of Aboriginal Affairs)가 원주민 가족 구성원들을 얼마나 감시하고 통제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파일은 개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웠다. 모든 개인 파일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원주민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부서의 파일, 경찰 파일, 보건부 파일, 왕실 법무부 파일(Crown Law Department File)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파일들이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대해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방법이었다… 할머니를 언급하는 파일들을 읽다보면 할머니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러한 문서들을 생산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았다… [그러나] 우리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파일들을 잃어버린 가족과 박탈당한 것들을 되찾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³¹⁾

식민 사회에서 후기 식민사회로의 전환 국면에서, 호주 사회는 억압받는 문화적 실체의 재발견과 이를 위해 과거에 있었던 아카이빙에

이 원주민이었다. 약 14년의 기간 동안, 원주민 아카이브 이용자에서의 이러한 변화에는 호주사회에서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Jane Anderson, “Anxieties of authorship in the colonial archives,” p.238.

31) Kinnane, *Shadows Lines*, Fremantle Arts Centre Press, 2003, pp.126-127.

어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즉 식민사회에서 후기 식민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사회적 통합과 화해의 일환으로 아카이브의 잠재력을 증명해야 했다.³²⁾ 후기 식민사회의 화해 문제에 대한 호주 기록학계의 논의는 호주 원주민 공동체에 기반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로 집약되었다. 그래서 국립기록청을 비롯해 다양한 아카이브들은 원주민 인명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인명색인과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원주민 기록의 복원과 이를 통한 사회적 화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원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방문한 아카이브에서 타자화된 그들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 '다중 출처주의'에 이은 원주민 인명 색인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같은 아카이브의 진전도 백인 통치의 일부 전략이 아니었냐는 회의론을 피할 수 없었다.

호주내 기록학계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보다 개혁적이고 체계적인 재구성을 고민하게 된다. 즉 기록의 생산, 분류 및 기술, 메타데이터, 평가, 접근, 활용 등 기록관리 전 프로세스에 있어 원주민의 타자화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및 프레임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전통적인 아카이브 이론에 대한 제고와 확장을 통해 호주원주민이 중심이 되는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체계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호주의 현용 행정기록의 효율적 조직화와 통제를 그 중심에 두는 전통에서 비롯된 다중 출처주의와 원주민들의 인명색인 작업 등은 잊혀진 원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주목을 이끌었으나 여전히 그 (후기)식민주의적 통치술의 일환으로 기획된 측면이 강했다. 즉 인종분리에 의해 배제된 원주민들을 백인 사회의 일부로 인정하고 포획하면서 이들에 대한 훈육 과정의 일환으로 인명색인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32) Michael Piggott and Sue McKemish, "Recordkeeping,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Reality",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Annual Conference, Sydney, August 2002, <<http://www.infotech.monash.edu.au/research/groups/rcrg/publications/piggottmckemish2002.pdf>,>, [cited 2014. 3. 15].

이제 피지배계급인 호주원주민들의 집단 기억 복원이라는 동시대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다중 출처주의’의 행정효율성에 입각한 아카이브 접근법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호주 기록학계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여 기록관리체계에서 원주민의 타자화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류 및 기술 프레임으로 제안되고 있는 ‘평행 출처주의’를 중심으로 동시대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기록학적 논의를 검토하려 한다.

2) 다중 출처주의에서 평행 출처주의로

지금까지 호주의 기록관리시스템은 사회적 공동체의 다양한 기록화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 주류 바깥에 존재하는 원주민 공동체는 호주의 공공 기록관리체계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러한 이유로 원주민 공동체는 호주 기록학계가 제안하는 아카이브 담론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기식민사회로 접어들면서 원주민 공동체가 호주 사회의 중심적인 문화적 실체로 떠오르자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제 더 이상 백인 관료체제 중심의 출처주의에 기반하여 원주민들을 아카이브에서 체계적으로 소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출처로서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관리, 보존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주체가 되는 새로운 기록관리 체계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호주 기록학계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했고, 결국 호주의 지배적인 기록기술체계인 다중 출처주의에서 ‘평행출처주의’(parallel provenance)로의 전환을 야기했다.

호주의 대표적 기록학 연구자인 크리스 헐리(Chris Hurley)는 후기 식민주의 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의 기록관리를 기존의 지배계급의 기록관리체계와 평행하게, 즉 동등하게 구축하는 아카이브 기술 체계를 언급하기 위해 ‘평행 출처주의’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는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복원은 무엇보다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기록의 기술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³³⁾ 즉 헐리의 평행 출처주의는 한마디로 ‘동시적’(simultaneous) 다중 출처주의로 정의된다. 기록의 생산주체가 곧 저작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 저작자 외에 그동안 기록되지 못하거나 기록된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기록되는 다양한 기록의 이해당사자들을 기록 생산의 주체이자 출처로 복원하여 관련된 맥락과 환경을 풍부하게 기술하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평행 출처주의의 핵심이다.

헐리의 평행 출처주의는 특히 뉴질랜드 사례에 빗대어 호주 사회의 원주민 문제를 환기시킨다. 그는 뉴질랜드가 백인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화가 뉴질랜드 백인(Pakeha)의 주류 문화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독해했다. 헐리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시각이 뉴질랜드 백인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 기록관리체계와 어떻게 동등하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의 산물로 ‘평행 출처주의’라는 개념을 제안한다.³⁴⁾ 헐리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마오리족의 토지 처분에 관한 문서의 경우, 비록 마오리족이 토지 문서를 생산하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마오리족은 더 이상 기록의 주체나 대상이 아니라 토지 문서의 생산을 야기한 사회적 출처로서 기존의 저작자 출처와 동등하게 분류/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⁵⁾ 저작자 단

33) Chris Hurley, “Parallel Provenance”, *Archives and Manuscripts*, 33 (1) 2005 and 33 (2) 2005, (<http://www.descriptionguy.com/images/WEBSITE/parallel-provenance.pdf>), pp.9-11. [cited 2014. 3. 19].

34) Sue McKemish, Barbara Reed and Michael Piggott, “The archive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eds, Sue McKe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 Center for Information Studies, 2005, p.192.

35) Sue McKemish, Barbara Reed and Michael Piggott, *Ibid.*

일의 맥락적 경계를 넘어 하나 이상의 동시적 복합적 출처를 동등하게 다루는 평행 출처주의에 입각해서 원주민 기록의 분류 및 기술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출처가 다를 경우에 기록은 상당히 다른 콘텐츠와 콘텍스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래의 아카이브 기술체계는 기존의 주류 기록관리시스템과 더불어 호주 원주민을 출처로 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을 동등하게 구축해 이중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³⁶⁾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분류와 기술을 위한 헐리의 평행 출처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호주에서 원주민 공동체 기반의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2004년에 시작된 빅토리아 주의 주립 아카이브와 쿠리(Koorie) 원주민 공동체, 그리고 모나쉬 대학의 학제간 프로젝트인 ‘신뢰와 기술 프로젝트’(Trust and Technology project)는 백인관료조직을 출처로 하는 현 공공기록관리시스템과 별도로 호주원주민을 출처로 하는 원주민 공동체 기반(community-based)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동등하게 구축하고자 했다.³⁷⁾ 특히 구술 기억과 관련하여 빅토리아주의 쿠리 원주민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하여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는 원주민 아카이브의 또 다른 평행출처인 기존의 공공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총괄적인(holistic) 원주민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풍부한 내러티브를 담아내고자 했다.³⁸⁾

평행 출처주의에 입각한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는 분류 및 기술영역에 대한 논의를 넘어 원주민 기록의 소유권체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카이브에서 원주민들이

36) Chris Hurley, “Parallel Provenance”, *ibid*, p.20.

37) <<http://infotech.monash.edu/research/about/centres/cosi/projects/trust/>>, [cited 2014. 3. 19].

38) <<http://infotech.monash.edu/research/about/centres/cosi/projects/trust/final-report/5-building.html>>, [cited 2014. 3. 19].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는 기록의 주제인 원주민들이 기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유권 체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료조직이나 저작자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기록의 소유권은 이후 원주민들을 기록에 대한 접근권이나 평가에 있어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원주민 공동체를 기록의 생산자로 참여시키는 ‘참여 아카이브’ 모델을 통한 원주민의 기록 소유권 회복, 그리고 백인 관료나 저작자뿐만 아니라 원주민을 원주민 관련 기록의 소유권자로 인정하는 기록의 공동 소유권 체계를 그 대안으로 제안했다.³⁹⁾

‘평행 출처주의’는 ‘단일 출처주의’의 개념과 논쟁하면서 호주의 아키비스트들이 지속적으로 출처주의를 아카이브의 분류 및 기술체계로서 포기하지 않고 이것의 범위를 확장하고 재정립하면서 발전시킨 후기식민아카이브의 분류와 기술을 위한 중요한 개념적 프레임이다. 아카이브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는 너무 협소해서 기록의 형성, 기능,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기록할 수 없다고 보고 기술을 풍부히 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했던 호주의 아키비스트들은 초기에는 지배계급 내부에서 다변화하는 복합 출처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다중 출처주의’를 통해, 최근에는 호주원주민이라는 피지배계급을 또 다른 사회적 출처로 간주하는 ‘평행 출처주의’를 통해 기록 맥락의 내러티브를 풍부히 기술하고자 했다. 평행출처주의는 한마디로 ‘사회적 출처주의’의 호주적 적용방식이자 다중 출처주의의 행정주의적 발상에 대한 비판적 발전의 형태로, 후기식민사회에서의 원주민 주체에 대한 재인식을 반영한 호주 기록학계의 발전적 기술체계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출처주의가 기억을 생산하는 지배적 ‘저자’ 혹은 통치자의 시각이 아닌 당대 사건의 당사자 및 이를 둘러싼 이해 주체들의 의미 생산의 다층성을 반영하는 맥락주의에 서 있다고 가정한다면, 평행 출처주의는 바로

39) Ibid.

이의 구체적 실현과 관계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다중 출처주의가 백인 지배층 내부의 내적 출처들의 관료주의적 효율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면, 평행 출처주의는 원주민 피지배층의 공통 기억으로 기록 출처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동시대의 시민사회적 요구에 응대하고 기록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5. 결론 : 평행 출처주의의 현재적 함의

호주에서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 과정, 특히 출처주의의 전개 방식은 한국 현대사 속 학살 사건 등 억압 국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함의를 던진다. 식민시기 이후에도 국가의 새로운 통치권자로 연결되는 백인 파워엘리트 중심의 호주 사회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해방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일제 식민 통치세력이 거세된 모양새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해방 이후 식민 통치자들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식민주의형 아카이브의 잔재는 그대로 잔존했다. 즉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한 식민관료의 행정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가 해방 이후 권위주의정권에서도 국가 기록 관리체제의 기본 골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 (후기)식민주의의 간접적 지배와 기록관리의 폐해 문제(미군정과 일제 지배의 직·간접적 사회 영향력)보다 심각했던 사안은 장기간에 걸쳐 군부통치에 의해 뒤틀렸던 아카이브의 왜곡과 부재였다. 권위주의 정권은 사실상 학살, 실종, 조작 사건 등의 비민주적이고 폭압적 ‘과거사’를 은폐하면서 ‘민초’들 공통의 집단기억을 강제로 망각하도록 이끌었다. 예를 들면, 관련 기록 문헌들의 기밀화나

무단 문서 폐기 등은 물론이고 사건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을 소외시키면서 역사적 사건 기록의 왜곡까지도 행했다. 이는 사실상 이제까지 살폈던 호주의 백인 지배계급-원주민 피지배계급의 배제와 소외의 기록사와 견주어 보면, 군부폭압의 권위주의정권-‘민초’ 민주사회의 구도속 은폐와 폐기의 기록사와 흡사해 보인다.

1990년대 중반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문민정부로 전환되면서 정치·사회 환경에서의 변화는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비롯해서 공공기록관리 분야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피지배계급의 역사적 진실과 화해를 위해 한국 현대사의 기록 컬렉션에 대한 동시대적 재구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1996년에 거창 사건에 관련된 과거사 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18개의 과거사 위원회가 최근까지 활동하면서 업무활동에 필요한 증거자료와 활동결과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를 수집하며 그동안 피해당사자들의 ‘빼앗긴’(stolen) 집단 기억을 복원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초’들의 억눌리고 잊혀진 ‘과거사’ 기억들의 민주적 복원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화해를 취했던 민간 정부들의 정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사실상 ‘과거사 위원회’의 과거사 아카이빙 활동은 호주내 원주민들을 통치대상에서 배제하고 분리하던 접근에서 사회의 일부로 통합하고 화해하려 했던 ‘호주원주민연구소’의 원주민 컬렉션 구축 및 호주 국립기록청을 중심으로 한 원주민 인명색인 작업들과 유사한 노력으로 보여 진다.

한국에서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는 이렇듯 정치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컸으며, 대체로 역사적 사건 이후 정치적 희생에 대한 보상, 혹은 위로부터의 화해의 제스처로 아카이브를 제도화한 측면이 컸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동시대적 재구성을 통한 집단기억의 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과거사위원회가 종료된 현 시점이지만 아카이브의 실제적 구축은 미진하다. 이는 단순히 과거사위원

회 아카이브를 물리적으로 구축하는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문제는 아카이브가 정치적 상징성을 극복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사회적 주요 기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카이브에서 소외되어온 피지배 계급이 주체가 되는 구체적인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호주의 ‘평행 출처주의’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보완적 시각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식민사회에서 후기 식민사회로의 전환에 직면한 호주에서 피지배 계급인 원주민을 지배계급과 동등한 출처로 복원하는 평행 출처주의에 따른 분류와 기술체계는, 한국에서 역사적 아카이브의 민주적인 동시대적 재구성을 위한 기록관리 체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재현되지 못하는 ‘민초’ 피해 당사자/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배계급 중심의 아카이브 구성에 동등하게 주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현재적 재구성 등 기존에 이미 제도화된 아카이브의 민주적 재구축은 물론이고 오늘날 동시대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민초’들의 수많은 사건과 현장들에 대한 기록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호주 원주민들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평행 출처주의’ 등 ‘사회적 출처주의’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호주를 비롯한 타국의 출처주의의 발전사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은 결국 국내 아카이브 민주화 과정에 좋은 사례이자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ABSTRACT

Aboriginal Community Archives in Australia and Current Meaning of “Parallel Provenance”

Lee, Kyong R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race the formation process of “parallel provenance” concept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aboriginal community archives development and draw it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rebuilding of domestic “past affairs-related committee archives”. Focused on historical development of aboriginal community archives in Australia, this writing divides its development into three periods: colonial archives, post-colonial archives, and contemporary archives and investigates each period’s distinct features in managing and building of aboriginal community archives. First of all, for colonial archives, it pays attention to Australia’s archival tradition, which focused on current record-keeping and then development of multiple provenance resulted from this tradition. Second, for post-colonial archives, it examines the appearance of aboriginal people as the subject of documentation category and name indexing on them. Finally, for contemporary archives, it analyzes current activities of Australia’s academic world of archival science for overcoming “the otherness” of aboriginal people through conceptualization of “parallel provenance”. Conclusively, through current meaning of parallel provenance, this study draws implications for democratic contemporary rebuilding of domestic past affairs-related committee archives, in which historical victims become the

subject of archives.

Key words : (post)colonial archives, archival turn, refiguring the archive, record-keeping history in Australia, aboriginal community archives, multiple provenance, parallel provenance, societal provenance, 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 aboriginal names index, past affairs-related community archives, “Stolen Generation”